

사회

교원평가 점수 어떤 학부모가 잘 쳤는지

담임은 알고 있었다

“후한 점수 줘 고맙다고 부모님께 전해라”

낮은 점수 준 학부모들 신분 노출 ‘불안’

내년 3월 교원능력평가제(이하 교원평가)의 전면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이 제도를 시범 운영중인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한 학부모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평가방식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A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이달 초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평가에 참여했다가 신분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원평가 코너에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뒤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내용은 담임교사의 수업 태도와 수업 진행 방식, 학교 경영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모든 항목의 만족도 부문에서 ‘매우 그렇다’라는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렸고, 얼마 후 자신의 담임교사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A

씨의 신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A씨는 “아이가 ‘담임선생님이 평가 결과 아주 잘 봤고, 고맙다고 부모님께 전하고 했다’는 말을 하더라”면서 “모든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내려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선생님께서 교원 평가에 앞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좋게 평가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저를 포함해 이 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여야 의원과 교원노조 및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는 교원 평가를 교원의 인사 및 보수 등과 연계할 경우 승진 및 임시경쟁 과정 등 제도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방식 등을 교원 및 학부모, 학생이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후반기 광주 55개교 등 전국 초·중·고 1천 594개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모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사건임을 전제로 “온라인 설문 조사의 경우 관리자에 한해 설문 참여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 컴퓨터실에서 진행된 교원 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선생님께서 교원 평가에 앞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좋게 평가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저를 포함해 이 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여야 의원과 교원노조 및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는 교원 평가를 교원의 인사 및 보수 등과 연계할 경우 승진 및 임시경쟁 과정 등 제도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방식 등을 교원 및 학부모, 학생이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후반기 광주 55개교 등 전국 초·중·고 1천 594개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모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동지죽 드세요”

신 500여명이 동지죽을 맛있게 먹고 있다. 무각사 신도들은 이날 1천명 분량의 동지죽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운암동 폐가서 50대 동사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증 장사

1,600여명에 허위증명서 발급 5억 챙겨

광주 6개 교육원 관계자 14명 입건 조사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수강생들이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해준 조모(54)씨 등 광주지역 6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계자 1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수강생 2천명을 모집, 이 중 1천600명이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를 작성한 뒤 광주시에 이를 제출

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강생 한 명당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80만원씩 받아 챙기는 등 5억원 가량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상당수는 교육 이수시간(신규 취득자 240시간, 간호사 등 경력자 40~160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중 유일하게 시험을 보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땀 수 있으며, 자격증이 있으면 부모를 돌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者에 대한 보호 대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1천600명의 명단을 광주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한 뒤 부실 자격증 취득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노인복지요양원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필수 고용인원을 채우고 급여 3천200만원을 가로챈 서모(37)씨 등 광주 노인 요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사 방향 알려주고 2억 받은 前 보험사 직원 영장

고흥경찰, “사실 알리겠다” 협박 돈 뜯은 부부도 입건

고흥경찰은 22일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전 보험사 직원 A(41)씨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돈을 준 B(여·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C(60)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C씨의 아내 D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사 조사 실장이었던 지난 2007년 9월 중순께 광성군 호남고속도로 석곡요금소 부근 갓길에서 고객 B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교통

사고로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27억 원 지급을 신청한 뒤 보험사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방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부부는 지난 3월 중순께 순천시 모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실종 20대 여 야산서 숨진채 발견

“불공정 승진심사 대학 1천만원 배상”

광주서부경찰, CCTV 분석

이틀 전 실종신고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인근 야산에서 모 통신회사 직원 K(여·26·서구 화정동)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30분께 서구 치평동에 사는 P(여·26)씨의 집에서 지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해어진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됐다.

경찰은 K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시점에 차량 내에서 수색작업을 해왔지만, 경찰은 K씨의 목 부위에서 목 줄임 흔적이 발견된 점과 시신이 발견된 바닥에 반향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광주에서 나주방면으로 향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고법 판결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2일 교수의 회 활동을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전남 모 대학교 조교수 김모(42)씨가 대학 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 층이 불공정한 심사로 김씨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정한 심사로 받을 권리로 침해한 불법행위여서 김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부교수 승진 임용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4월 후보 9명 가운데 4명이 승진한 심사에서 탈락해 “교수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승진이 거부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대학 교수의 임면이 아닌 승진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심야전기 보일러 마지막 설치 기회!!

• 현장에서는 심야전기 사용률 급증을 하지 사용후 충전할 바랍니다.

• 일부면기 신한면 12월 30일까지
법수 100% 기준 됩니다.

• 현재 최대 즐길 콘택션 200kw, 240kw
기준됩니다.